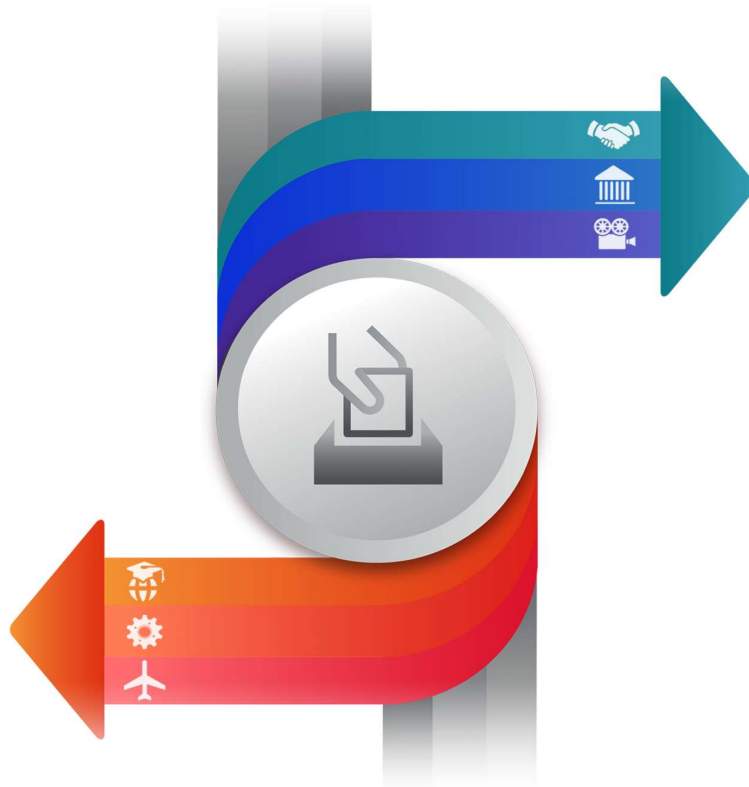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공약과제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1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2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3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4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이행

5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

6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7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8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9 인천형 천원주택 전국으로 확대

1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E 조속 추진

1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 필요성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FDI의 78.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내는 지역이나 향후 첨단전략산업 투자 유치에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태
- 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20분 이내 연결될 수 있는 공항경제권으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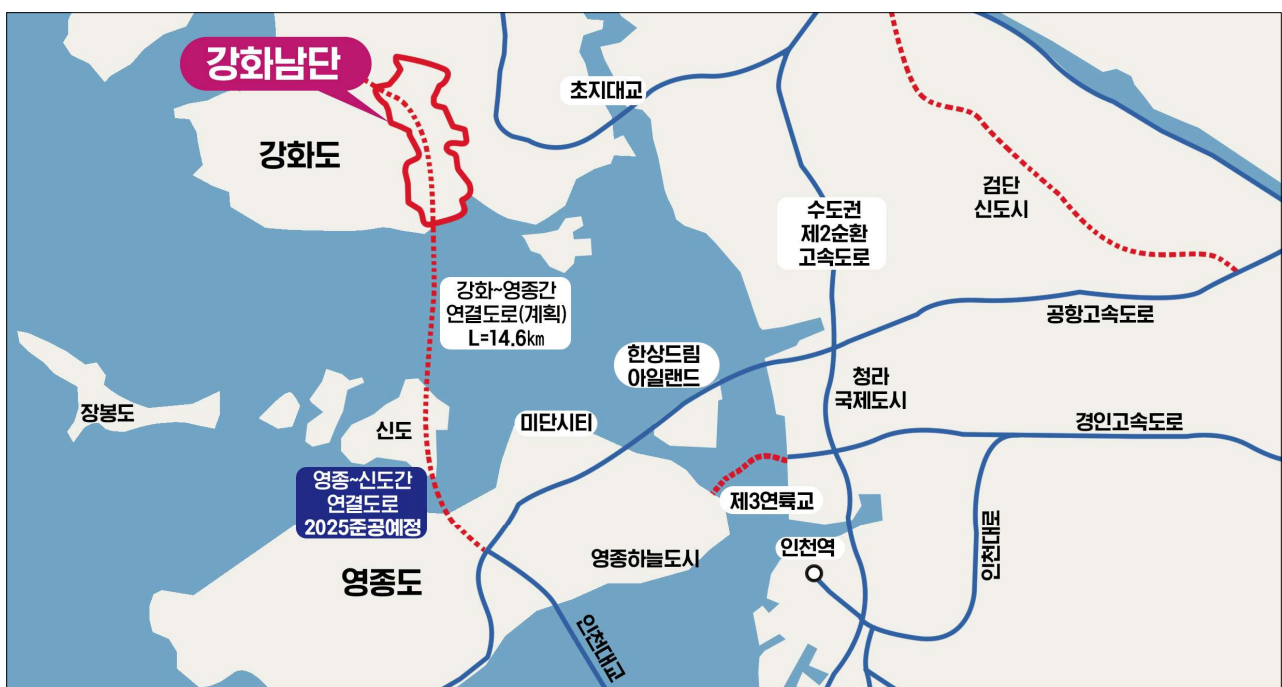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규모)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 10.03km²(약300만평)
- (사업기간) 2025.~2035. ※추정사업비 4.1조원
- (도입기능) 첨단산업, AI기반도시, K문화관광, 미래자유도시

< 건의사항 >

-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강화남단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시 시너지 기대



2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 필요성

-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의 생활인구 증대(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에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구간) 인천 영종도(인천공항)~옹진군(신도)~강화군(길상면)
- (사업규모) L=14.6km* (B=13.5m, 2차로) ※ 추정교통량 1만 4천대/일
* 【1단계】 영종~신도 3.2km(예타면제, '26.上.준공) / 【2단계】 신도~강화 11.4km(기본계획 중)
- (사업기간) 2020.~2035.
- (추정사업비) 약 5,000억원(현 2차로 기준, 4차로 확대 시 9,500억원)

< 건의사항 >

- ◆ **국도지정(6호선) 등 국가계획 반영, 예타면제 및 우선추진**
→ 강화의 정주여건 개선 및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필수조건



3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 필요성

-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 확충 필요
-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주요 도시의 철도 연결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구간) 인천역(수인선)~인천공항제1터미널(공항철도)
- (사업규모) L=16.6km, 정거장 2개소 / (총사업비) 1조 6,605억원

< 건의사항 >

◆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

➔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 <부산>212분→167분(△45분), <광주>171분→141분(△30분), <강릉>157분→134분(△23분)



4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이행

□ 필요성

- 30여년간 수도권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일방적 피해* 종식과 인근 지역 공동주택 입지 등 여건변화**에 따른 종료 요구 증대

* 매립지 주변 폐기물 처리업체 난립·침출수 피해 등, ** 조성 당시 2만명 ⇒ 현재 약 40만명

-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합의사항('15.6.) 중 미진한 대체매립지 조성,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의 철저한 이행 필요

□ 추진경과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 합의('15.6.)
 - 대체매립지 확보, 매립면허권, 토지 소유권,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 대체매립지 총 3회 공모 시행('21.1., '21.5., '24.3. / 응모지자체 無)
- 대체매립지 4차 공모 협의 진행 중('25.4.)

□ 쟁점사항

- (대체매립지 조성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3-1공구 사용 합의하였으나, 미이행
-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천시로 이관토록 하였으나, 이행 중단

< 건의사항 >

- ①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 ② 임기내 정부(국무총리실·환경부 등)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
- ③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사항 신속한 이행

5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 필요성

-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의 부담금(LH의 사업 조성원가에 포함)으로 건설한 제3연륙교에 높은 통행료 책정 예정으로 주민 불만 팽배

* 국토부의 민자 손실보상금 부담 전가 요구로 통행료 4,000원 이상 책정 불가피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중구 중산동(시점) ~ 서구 청라동(종점)
- (사업규모) L=4.7km, B=30m(왕복 6차로+자전거도로 · 보도겸용)
- (사업기간) 2015. ~ 2025. / (사업비) 7,709억 원

< 건의사항 >

- ◆ **정부 손실보상금 부담 제외로 제3연륙교 무료도로화 실현**
→ 정주여건 개선 및 공항·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6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 필요성

-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로질러 인천도심 생활권과 경제권이 남북과 동서로 단절
- 환경·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화 및 상부개발을 통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필요

□ 경인전철 지하화

- (사업구간) 인천~부개(13.9km, 11개역) * (전체)인천~구로(27km, 21개역)
 - (공사비) 3조 4,000억원 * (전체)9조 2천억원(국토부 추산)
 - (재원조달)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이익
- ※ 인천·서울·경기 공동 수혜를 고려하여 개발이익 교차보전 필요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 (사업위치) 청라1동 ~ 신월IC
- (사업규모) 지하도로 건설(L=15.3km, 4차로)
- (총사업비) 1조 3,780억원
- (사업기간) 2023. ~ 2029. * '25.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예비타당성조사에 많은 기간(2년 6개월)이 소요되어 전체적인 사업기간 지연

< 건의사항 >

- ◆ [경인전철 지하화]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사업반영 및 우선추진**
-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속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추진으로 **조기공사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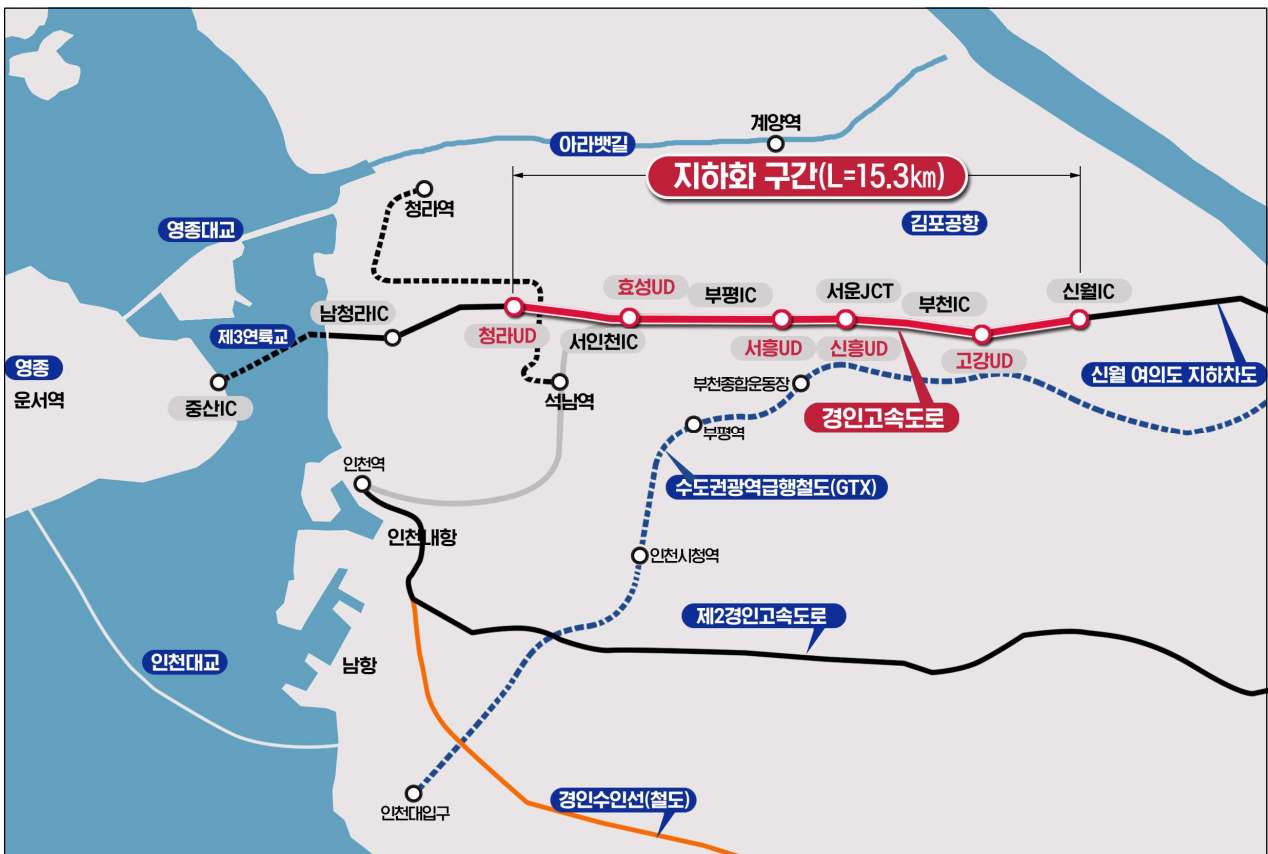
참고

노선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7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 필요성

- 현행 법률상 지자체 요구에 의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매우 불합리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전무한 상황
- 국가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탄약고, 항공대 등의 군사시설 이전에 국비지원 추진

□ 국방·군사시설 개요

구분	제0보급단 및 000여단	제000탄약중대	제000항공대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위치	부평구 산곡동	계양구 굴현동	부평구 일신동	중구 복성동1가
면적	약 85만㎡	약 63만㎡	약 8만㎡	약 23만㎡
주변 여건	부대외곽 2km 내 부평구 산곡, 청천동 주민 13만 5천명 거주	부대외곽 1.5km 내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건설중, 계양역·굴현역 입지	부대외곽 1.5km 내 부평구·남동구 주민 9만 7천명 거주, 부개역·송내역 입지	인천대교 건설에 따른 '인천해역 방어' 임무수행 지장 초래

□ 기대효과

- (국방) 노후된 국방·군사시설 현대화, 원활한 작전수행 여건마련
- (지역) 주민 안전문제 해소 및 생활여건 개선, 지역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 건의(협조)사항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군공항이전법」, 「광주군공항이전법」 등 타 군부대 이전 법령에 준하는 **국비지원**

▶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8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필요성

- 감염병 전문병원은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안전망의 핵심 시설로, 감염병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기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도권에 추가 구축 필요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 수도권 1개소, 제주권 1개소 추가 구축
- 해외유입·신종감염병 국내 확산 선제적 차단 및 대응 위해 공항·항만 등 국가 주요 출입국 시설이 위치한 관문도시 인천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국비 편성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
- (사업대상)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4
- (사업내용) 감염병 위기 대비 독립된 감염병동 구축
 - 음압병상 36병상, 외래관찰실·음압수술실 각 2병상
- (총사업비) 449억 원(국비 100%)

□ 쟁점사항

- 신종감염병 대유행 주기적 유행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완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부지 확보 등 예산 반영 조건 완비 상태인 인천시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우선 순위 구축

< 건의사항 >

- ◆ 해외유입 신종감염병의 국내 확산 선제적 차단 및 대응을 위한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9 인천시 「천원주택」 전국으로 확대

□ 필요성

- 최근 신혼부부 및 출생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출생률 저하* 및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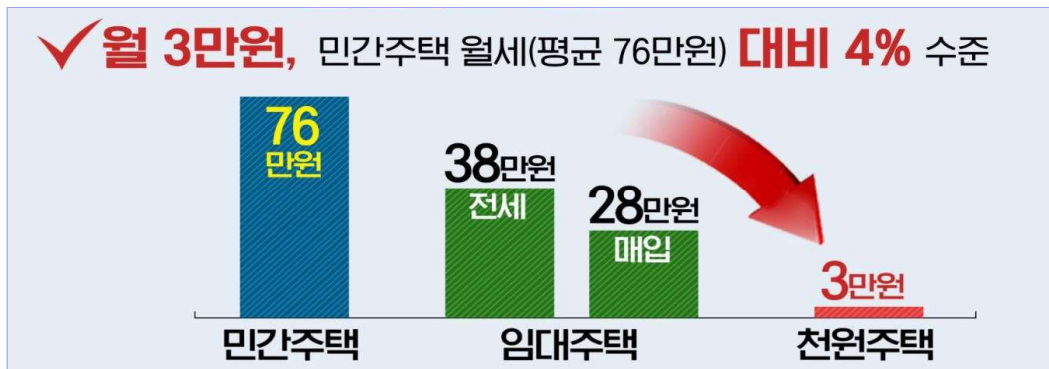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변화: 2.06명(1983) ⇒ 1.05명(2017) ⇒ 0.72명(2023) ⇒ **0.75명(2024)**

- 인천시는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 「천원주택」 시행 중

※ 인천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달성 ('24년 기준, 전년 대비 11.6% 상승)

□ 사업개요

- (지원내용) 매입 및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천 원**'(월 3만원)으로 최장 6년 공급하여 (예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
- (신청자격) 무주택가구 중 신생아 가구, (예비)신혼부부 등



□ 추진방향(천원주택을 국가정책으로 전환 및 전국 확대)

- 국가 매입·전세 임대주택 유형 중 신혼·신생아 유형을 「천원주택」으로 우선 지원하여 국가적·시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해결

< 건의사항 >

- ◆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을 국가 출생률 제고를 위한 국가주도 주거정책으로 전환 및 전국 확대

1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GTX-E 조속 추진

□ 필요성

- 남북축 광역급행철도(GTX-A, B, C)에 비해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부족
- 수도권 서부의 교통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GTX-D, E 노선 필요

□ 사업개요

○ GTX-D (Y자)

- (사업구간) 장기·검단·계양 > 대장·부천종합운동장·삼성 < 잠실·교산
인천공항·청라·가정
- (규모/사업비) 연장 185km, 정거장 27개소 / 미정

○ GTX-E

- (사업구간) 인천공항~대장~서울(평창·광운대)~구리~덕소
- (규모/사업비) 연장 88km, 정거장 16개소 / 미정

< 건의사항 >

◆ GTX-D, E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 수도권 주요거점 간 30분대 연결을 통한 출퇴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인천발전을 위한 공약과제 요약

- ◆ 5대 분야
- ◆ 22개 공약과제
- ◆ 53개 세부사업

목 차

I. 교통인프라 확충

1.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19
①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추진	
2.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19
②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③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착공	
3-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완성	20
④ GTX-B 추가정거장 설치	
⑤ GTX-D(Y자), GTX-E 조속 건설	
4. 인천 중심의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21
⑥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속 추진	
⑦ 대장홍대선(서울2호선) 청라 연장	
⑧ 서울5호선 검단, 강화 연장	
⑨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⑩ 인천 순환3호선 건설	
⑪ 인천1호선 송도 연장	
⑫ 서해안 평화고속도로 건설	
12-1.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⑬ 수도권 제2순환선(인천~안산 구간) 추진	
⑭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	
⑮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⑯ 문학IC~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	
⑰ 서부수도권 S-BRT 연결	
⑱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	

II. 미래성장 동력 확보

5. 글로벌 톱텐시티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26

- 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6.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2경제도시 완성

- ②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완성
 - 20-1. 송도 바이오특화단지 확대
 - 20-2.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조성
 - 20-3. 바이오 특화단지 R&D 육성 지원
 - 20-4. 양자·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 ③ 차세대 바이오용 반도체 글로벌 허브 육성
- ④ AI기반 로봇생활도시 구현을 위한 실증타운 조성
- ⑤ 미래에너지파크 조성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 ⑥ 중고차 수출 복합전문단지 조성
- ⑦ 공항경제권 및 항공 MRO 체계 구축
 - 25-1. 인천국제공항 5단계(최종) 건설사업 추진
 - 25-2.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
 - 25-3. 공유경제형 항공MRO 체계 구축
- ⑧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26

III. 도시개발 · 해양항만

7.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32

- ① 인천항 미래발전 프로젝트 추진

8.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재배치

- ②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재배치
 - 28-1.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 28-2.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 ③ 캠프마켓 신숙 추진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

32

9. 글로벌 해양레저도시 인프라 구축

- ③⑩ 인천해사법원 설치
- ③⑪ 인천해양대학 설치 33
- ③⑫ 경인아라뱃길 주변개발 및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 조성
- ③⑬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건설

10. 계양역 복합개발 프로젝트 추진

- ③⑭ 계양역 복합개발 프로젝트 추진 35
- ③⑮ 계양테크노밸리 광역철도 도입

IV. 의료 · 문화 · 관광

11. 인천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 ③⑯ 제2의료원 설립 36
- ③⑰ 영종 종합병원 설립
- ③⑱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2.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 ③⑲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37

13.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인천 설치

- ④①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인천 설치 37

14. K-콘텐츠랜드 조성

- ④② 공항경제권 중심 K-콘텐츠랜드 조성 38

15.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공원도시 지정

- ④③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공원도시 지정 38

16.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 지방 이양

- ④④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 지방 이양 39
- 43-1. 카지노 레저세 입법 추진

V.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해결

17.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40

- ④④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이행

18. 접경지역 균형발전 도모

40

- ④⑤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 ④⑥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46-1.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46-2.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 46-3. 국민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 46-4. 전기요금 감면
- ④⑦ 인천 연안해역 조업 및 서북도서 운항 규제완화
 - 47-1. 인천 연안해역 조업규제 완화
 - 47-2. 여객선 운항 규제 완화
- ④⑧ 북한 대남방송 중단 및 피해지원

19.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 지원

42

- ④⑨ F1그랑프리 인천 유치를 위한 국가적 지원

20. 인천형 출생정책의 국가정책 전환

43

- ⑤⑩ 인천형 출생정책 **i+1 dream**의 국가정책 전환
- ⑤⑪ 인천형 천원주택 전국으로 확대

21. 9·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44

- ⑤⑫ 9·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22.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재정 지원

44

- ⑤⑬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재정 지원

1 교통인프라 확충

1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증가 예측*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연결 철도망 부족** * 이용수요 : '33년 1억명 돌파 예측(국토부, '21.8.) ** 인천공항발 KTX 운영 중단(2014~2018)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주요 거점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철도 확충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인천역(수인선)~인천공항 제1터미널(공항철도) * 인천발 KTX를 (수인선 송도역~안산시 초지역~안산시 여천역) 인천공항까지 연결 ○ 사업규모 : L=16.6km, 정거장 2개소 ○ 총사업비 : 1조 6,605억 원

2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 및 우선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선은 도심을 가로질러 인천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남북과 동서로 단절 ○ 환경·교통문제 해소 및 도심 연계를 위한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한 도시공간 구조 재편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인천구간)인천~부개, (전체구간) 인천~구로 ○ 총사업비 : (인천구간) 3조 4천억 원, (전체구간) 9조 2천억 원 ○ 재원조달 :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이익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제정)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착수 [조속한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고속도로 건설로 상습 정체 해소 및 동서축(인천~서울) 도로망 구축 ○ 도심 단절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청라1동~신월IC ○ 사업규모 : 지하도로 건설 (L=15.3km, 4차로) ○ 총사업비 : 1조 3,780억 원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5.1.)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관리권 조기 이관 →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고속도로는 55년간 건설유지비를 초과*하여 통행료 징수 중 * 회수율 259.9% ○ 부천·김포시민은 무료, 인천시민만 유료 적용에 대한 오랜 불만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착공 시 고속도로 기능 상실** ** 차선축소 및 통행속도 감소
-----	--

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완성

- ▶ GTX-B 추가정거장 설치
- ▶ GTX-D (Y자노선), 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신속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B가 지나는 원도심 지역의 개발 촉진 및 광역철도망 수혜 지역 확대를 위해 추가 정거장 1개소 설치 필요 * GTX-B와 동시 개통('30년)을 위해 신속한 결정 및 실시설계 반영 필요 ○ 수도권 남·북축에 비해 부족한 동·서축 연결 노선 확충 필요 *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노선 : 인천대입구~(추가역)~인천시청~부평~서울역~경기 마석 * '25년 상반기 중 민자구간 착공 예정 (재정구간은 '23년 착공) ○ D노선 : 인천공항~청라~가정~대장~부천~삼성~팔당/원주 ○ E노선 : 인천공항~청라~가정~대장~상암~구리~덕소

4 인천 중심의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속 추진 (민자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남동·연수, (경기)시흥·부천 등 수도권 서남부 철도 소외지역에 광역철도망 구축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부, '21.7.) 반영 사업 *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 서명운동, 시민 약33.4만명('24.11.)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인천 청학 ~ 광명 노온사 ○ 사업규모 : L=21.9km ○ 총사업비 : 1조 6,879억 원 / 민자사업

대장홍대선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라~계양~서울 간 동·서축 대중교통 확충 ○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입주시 예상되는 도로 혼잡에 대응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청라~가정~작전~부천~홍대입구 ○ 사업규모 : L=17.61km, 정거장 7개소 ○ 총사업비 : 1조 6,617억 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연계, 강화연장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철도가 없는 검단과 교통 낙후지역인 강화에 철도 구축 *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24.9.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서울(방화)~검단~김포~강화 ○ 사업규모 : 강화연장 17km ○ 총사업비 : 1조 7,000억 원(강화군 추정)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서북부지역 철도 이용자의 서울 진입 편의 제고 및 서울9호선 이용객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사업내용	○ 사업구간 : 인천공항T2~김포공항~중앙보훈병원 (80.2km) * (운행) 1일 66회, 35분 간격 운행 ○ 사업규모 : 차량제작(6량, 8편성), 전기·신호·통신 시스템 공사 ○ 총사업비 : 2,116억 원(공항철도 1,159, 서울9호선 957)

인천 순환 3호선 건설 신속추진을 위해

▶ [국토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 [기재부] 예타사업 선정

필요성	○ 인천시 서부권 철도 수요 대응하고 원도심(중·동구)과 신도시(송도·청라·검단) 연결 필요 ○ 인천시 주요 정책과 연계한 내부 순환철도망 완성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행정체제 개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사업내용	○ 사업구간 : 검단신도시~청라~동인천~신포동~송도국제도시 ○ 사업규모 : L=34.64km, 정거장 19개소 ○ 총사업비 : 3조 2,179억 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기재부]

필요성	○ 송도국제도시 8공구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충족 및 도시철도망 연계 * 7개 단지 16,272세대(4.6만 명) → 5개 단지 2,901세대(8천 명) 추가 입주 예정
사업내용	○ 사업구간 : 송도달빛축제공원역~송도8공구(미송중학교) ○ 사업규모 : L=1.74km, 정거장 2개소 ○ 총사업비 : 4,020억 원 (국비 2,412, IFEZ 1,608)

국가 물류체계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 평화고속도로 **고속국도 지정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공항·항만과 도로를 연계하는 복합교통망 구축으로 물류 수송비 절감 등 글로벌 물류·관광 경제벨트 형성 ○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간 접근성 개선, 국토균형발전 도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인천)강화~영종~영흥~(충남)서산 ○ 사업규모 : 66.7km, 2~4차로 (해상교량 및 해저대심도터널) ○ 총사업비 : 9조 6,476억 원(추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도지정 등 국가계획 반영, 예타면제 및 우선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인프라에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성공적 추진, 장래 남북교류협력 기반 마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영종~신도~강화 * 1단계 영종~신도 도로공사 : ('21.1. 착공, '26.下 준공예정) ○ 사업규모 : 14.6km, 2차로 ○ 총사업비 : 5,000억 원(* 4차로 확장 시 9,500억 원)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속한 통과 [환경부]**
- ▶ **조기착공을 위한 일괄입찰(Turnkey)방식 제안 [국토부 및 도로공사]**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제2순환선 건설로 서해안선 및 영동선 등 상습 지·정체 구간 교통수요 분담 ○ 전구간 조기 착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조속 완료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남항(서해대로)~시흥시(시화IC) ○ 사업규모 : L=19.8km, B=23.4m (4차로, JCT 1개소, IC 4개소) ○ 총사업비 : 1조 6,889억 원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잇는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 고속(일반)국도 지정 또는 제5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반영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 경인고속도로는 현재 지·정체 해소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최근 5년간 교통량은 연평균 4.5%씩 증가,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 22%이상 급증 ○ 원도심과 서울간 도로 연결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인천 미추홀구(용현동)~서울 구로구(오류동) ○ 사업규모 : L=18.7km, 4~6차로, 설계속도 90km/h ○ 총사업비 : 1조 8,015억 원 (민간 1조 1,959, 건설보조금 6,056)

서창~김포 고속도로 '적기착공' 요청 [조속한 총사업비 협의 및 통행료 협상 마무리]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제1순환선 상습 정체구간(계양IC~장수IC) 해소를 통한 고속도로 기능회복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난 개선 ○ 3기 신도시(계양 테크노밸리, 부천·대장) 본격 추진('28.10.입주)에 따른 대규모 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남동구 만수동(서창JCT)~김포시 고촌읍(김포TG) ○ 사업규모 : L=18.27km, 4~6차로(JCT 2개소, IC 3개소) ○ 총사업비 : 7,572억 원 (건설보조금 2,265, 민자 5,307)

문학IC~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의 국비 지원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예타 대상 선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축 간선교통망 확충 및 도로용량 증대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 용현·학익 도시개발, 아암물류 2단지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문학나들목~주안산단고가교 * 1단계 영종~신도 도로공사 : ('21.1. 착공, '26.下 준공예정) ○ 사업규모 : 지하도로 4km, 왕복 2~4차로 ○ 총사업비 : 4,714억 원(국비 2,357, 시비 2,357)

서부수도권 S-BRT 사업 (강화, 영종, 청라, 송도) 국비 재정지원 비율 상향
[현행] 광역BRT 50%, 도심BRT 25% → [조정] 광역BRT 70%, 도심BRT 60%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및 서울, 인천과의 수도권 접근성 확보에 한계 ○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배후지역 간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하여 공항경제권 내 및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 연계성 확보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종대로 BRT구축 및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ex-HUB 설치 ○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ex-HUB와 광역버스 및 간선버스 연계 ○ 영종대로 BRT ~ 제3연륙교 ~ 청라BRT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와 연계하여 서울 접근성 확보

제3연륙교 손실보상금 부담 제외로 무료도로화 실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유일 무료도로가 없는 영종지역은 민자교량 통행료 부담 ○ '25년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에 국토부의 민자 손실보상금 부담 전가 요구로 높은 통행료 책정(4,000원 이상)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주민 불만 여론 예상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중구(영종) 중산동 ~ 서구 청라동 ○ 사업규모 : L=4.7km, B=30—m(왕복 6차로, 자전거도로, 보도) ○ 총사업비 : 7,709억 원

11 미래성장 동력 확보

5 글로벌 톱텐시티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강화남단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시 송도-영종-청라 지역과의 시너지 기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대비 FDI 78.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내는 지역이나, 첨단산업용지가 부족 ○ 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20분 내 연결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이며,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영종·청라·송도) 산업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하여 풍부한 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는데 유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 10.03km(약 300만 평) ○ 총사업비 : 4조 1,000억 원 추정(영종~강화 평화도로 4차로 연결 포함) ○ 도입기능 : 첨단산업, AI기반도시, K문화관광, 미래자유도시

6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2경제도시 완성

송도 바이오특화단지 확대를 위한
관공선부두의 인천신항 이전 및 산업용지 전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24.6.) ○ 단지 내 '관공선부두'가 도심과 인접해 있어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 제한 요소로 작용 ○ 이에, '관공선부두'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미래 첨단바이오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특화단지의 기능 강화 및 공간 효율성 제고 필요
-----	--

국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종지역은 국제공항, 항만, 수도권 연결 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우수하여 수출, 콜드체인, 물류 등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 ○ 송도 바이오 특화단지, 서울, 판교, 광교 등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산업 간 연계성과 클러스터 시너지 창출에 유리 ○ 영종 제3단계 유보지는 수도권 최대 유희 부지로, 보상·매입 절차 없이 최단 기간 내 조성 가능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영종도 제3단계 유보지 내, 3,6km²(약 110만 평) ○ 사업내용 : 첨단산업 선도기업 및 혁신 중소·중견기업 유치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R&D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 요청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은 글로벌 선도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가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지이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첨단 신약·의료기기 R&D 인프라 조성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특화단지 R&D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항암바이오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100억 원) - 바이오 원부자재 제조혁신 및 품질검증 체계 구축(40억 원) - 첨단바이오 의약품 메뉴팩처링 기술개발(40억 원) - 양자컴퓨팅 신약개발 환경 구축(150억 원) ○ 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560억 원)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양자 융합 혁신사례 창출을 위해 인천을 '양자 클러스터' 로 우선 지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체인저로서 양자기술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확정('25.12.) 및 지정('26년~), '25년 1,980억원 투자 ○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융합사례가 창출되는 양자융합 거점 조성 필요 ○ 양자기술과 市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 창출, 인재양성, 관련 소·부·장 산업이 선순환되는 생태계 구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 기반구축) 양자센싱(암 조기진단·바이오센서), 양자암호(공항·항만 보안) 상용화로 양자 전환(QX) 성공모델 구축, 관련 소부장 산업 확산 ○ (글로벌 협력 거점) 공항·항만 등 우수한 접근성과 바이오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및 연구·산업화 네트워크 강화 ○ (핵심역량 확보) 연세대(127큐빗 양자컴) 등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한 양자기술 인력 양성 및 유관산업 양자인재로 전환 육성

차세대 바이오용 반도체 글로벌 허브 육성 사업을 2027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조속 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기술은 자동차, 조선 등 국가 기간산업을 넘어, 의료 등 신성장 동력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와 의료 산업과의 융합은 '30년 기준 USD 5천억 시장 예상 ○ 인천시의 강점인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융합할 수 있는 정부기반 바이오용 반도체 팹(fab.), 반도체 제품화 및 지원 기반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대구) 나노융합기술원,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광주)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 나노융합기술원 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6.~2033.(8년 간) ○ 대상지역 : 송도국제신도시 11공구 내 ○ 총사업비 : 5,400억 원 (국비 4,700, 시비 450, 민간 250)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 반도체 후공정 중심의 국가기반 fab 및 제품화 지원 기반 구축 - 기술개발 : 바이오·반도체 칩 설계, 제조 및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 - 생태계 : 신기술 사업화, 규제 개혁, 기업 집적화 및 협력체제

- ▶ 인천로봇랜드 “로봇특구지정” 을 통한 규제 Free Zone으로 자유로운 로봇테스트가 가능한 제도적 지원 필요
- ▶ AI · 로봇 일상생활 실증 ·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로봇, 빅데이터 등의 핵심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신기술을 안전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증공간 필요성 증대 ○ 국제적 인프라와 스마트 도시 구축에 최적화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로봇 기술과 연계한 ‘AI 친화도시 인천’ 조성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구 내 ○ 주요내용 : 현실 도시환경을 축소·재현한 공간을 조성하여 피지컬 AI 기반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람과 협업 가능한 기술인프라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기반 로봇통합관제 및 실시간 로봇활용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 스마트주거와 공공서비스 체험구역 조성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 Zone - 시민은 미래 생활공간을 체험하고, 기업은 피드백을 통해 제품 고도화 기회를 얻고, 공공은 취득데이터를 연계한 미래 도시 조성과의 연계

미래에너지파크 조성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 ▶ 영흥화력발전소의 무탄소 연료전환을 위한 인프라 지역을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지역은 청정수소 입찰 시장 참여 가점 특례 적용
- ▶ 해상풍력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인·허가 지원
- ▶ 첨단산업 육성 및 지산지소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인 영흥화력발전소의 무탄소 연료전환 추진에 따라 수소연료 기반의 미래에너지 거점 조성 시급* *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국무총리, '23.2.2.)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옹진군 영흥면 일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전환 : 석탄화력 중심에서 수소기반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 - 해상풍력 : 해상풍력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중고차 수출 복합전문단지(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을 위한

▶ 남항 우회도로 건설 지원 [해수부]

중고차 수출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 자동차관리법 개정 [국토부]

▶ 중고차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 [산업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차 수출 매년 증가 추세*, 그러나 영세업체 위주 구조와 낙후된 수출 인프라로 중고차 산업 성장 한계 및 경쟁력 둔화 우려 * '24년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화장품 68억 달러, (2위)자동차 51억 달러 ○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천항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인천 남항 일원(중구 항동) ○ 사업규모 : 398,155㎡(약 12만 평) *인천항만공사 소유 배후부지 ○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가 IPA 부지를 임대하여 개발, 운영 ○ 사업내용 : 윈스탑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 단지 조성

인천국제공항 5단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 반영 및 조속 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수용능력 초과 예상* * '33년 여객수 연 1억 636만 명 / 현재 수용능력 1억 600만 명 ○ 인천국제공항 5단계 건설로 미래 항공수요 대응 및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약 6조 원(공사 자체재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여객터미널(2,500만 명 규모) - 제5활주로, 계류장, 도로시설 확충 등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요구 * (운송) → 운송, 산업, 관광 ○ 직접경제권(MRO, UAM 등) 산업 유치 및 배후경제권(부품, 교육·연구 등) 개발 필요 ○ 그러나, 각 개별법 규정에 따른 협력적 시너지 부재 및 산업별 앵커기업 유치 등 한계 노출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범위 :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영종도, 남동공단 등) ○ 주요내용 :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

저비용 항공사(LCC) 등 항공안전을 위한 공유형 항공 MRO 생태계 구축정책 수립 및 선도사업 TF팀 구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정비 원인 결항 증가 추세*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 * ('20)69건 → ('21)85건 → ('22)86건 → ('23)216건 → ('24)218건 ○ 저비용항공사 등은 자체 정비기반 미흡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인천국제공항에 공유형 항공정비시설* 구축 * 항공기 도장 및 정비 격납고, 부품·장비 공유센터, 항공교육훈련센터 건설·운영 등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문화산단으로 조성 및 국비 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증가,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근로자 기피 및 입주기업 구인난 심화 ○ 침체된 산업단지에 문화요소 도입, 편의·복지시설 확충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구)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브랜드 구축, 문화·예술·편의공간 확충 - 청년 거주·창업·벤처, DX-AX-R&D 지원 시설 등 공간혁신구역 조성

111 도시개발 · 해양항만

7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국가 정책적 차원의 「인천항 비전 2040^[가칭]」 공동 수립 및 인천항 내항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의 글로벌 고도화 및 시민친화적인 해양공간화 등을 위한 해수부와 인천시 공동* 미래전략 수립 필요 * 인천항 종합발전계획('16.)을 해수부 단독 수립했었으나, 지역성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부족 ○ 인천항 내항은 전체 약 3.3조원 규모(추정)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현재 1단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 검토 중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미래전략 수립) 인천항 현대화 및 고부가가치화, 관광·마리나 활성화, 항만 주변도심지역과의 연계 등 ○ (내항 재개발 프로젝트) 노후된 항만을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중구 항동 및 북성동 내항 일대, 약 1.74km²

8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재배치

도심 내 보급단, 탄약고, 항공대 등 군부대 이전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군사시설이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심 내에 위치하게 되어 주민불편 초래 및 지역발전 저해 ○ 현행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자체에 매우 불리하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전무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하여 행·재정 지원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부평구 보급단, 항공대대 및 계양구 탄약중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을 국방부 사업으로 우선 추진 하고,
[인천시에서 추진 시] 비용분담, 수용성 확보 등 국방부 역할 요청**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사업인 인천대교 건설('09.)로 사령부 임무수행 지장* 초래 * 항로폭 축소(2,000→625m)로 함정 안전운행 제한, 대교 피폭시 함정 입출항 제한 ○ 인천시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및 원도심 균형개발 등을 위해 이전 필요
사업내용	○ (현재) 중구 북성동 → (이전) 송도신항 또는 무의도 남단

캠프마켓 신속 추진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 ▶ 부지매입비 산정기준 '반환일 기준' 적용
-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까지 '국비지원' 확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마켓으로 인해 70년 간 지역낙후, 주민불편 등 피해 ○ 캠프마켓 반환지연, 제한적 국비지원, 사업비용 지속 상승 등으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공여구역 : 440,000㎡(캠프마켓) + 5,921㎡(오수정화조부지)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 7,130,000㎡ ○ 활용계획 : 공원(식물원), 제2의료원, 소방서, (부평구)도시재생 뉴딜혁신센터 등

9 글로벌 해양레저도시 인프라 구축

공항과 항만이 있는 최적지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강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해사법원 (국내)설치 필요 *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연간 2,000~5,000억 원 국부가 해외로 유출 ○ 해양물류의 중심지이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수한 인천이 최적지 * 국내 수요자 수도권 집중(선주 64.2%, 국제물류중개업 79.9%, 해운·항만·물류업체 54.9%) ** 인천 컨테이너 물동량 對중국 비중 60.7%, 중국과 해양 분쟁 해결 강점
-----	--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양대학 신설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해양대학 설치 기반마련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은 해양물류의 중심지로 해양수산 여건 변화 대응과 미래 해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 및 시너지 창출 도모
-----	---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획사업으로 주변지 개발 추진

▶ GB해제 및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 조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반시설인 경인아라뱃길에 의해 단절된 인천 북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아라뱃길 주변의 활성화가 중요 ○ 시민 휴식, 다양한 문화와 레포츠 향유가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획사업 추진) 경인아라뱃길 주변* GB에 친수구역사업 개발 * (계양구) 계양역세권 지구, 장기친수특화지역, 상야산업지원지구, (서구) 공촌사거리 지구, 백석수변문화지구, 검암역세권 지구 ○ (관광인프라 조성) 주차장,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 (해양친수 레포츠 확대) 요트 및 소형선박 계류장 개선 및 확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갑문 설치를 통한 홍수위 조절과 “□”자 수로 구축으로 방재기능 개선 및 친수도시 조성 ○ 수변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마리나 항만 중심의 복합레저 관광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워터프런트 1단계 조성사업은 진행중으로 2단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미반영 시 방재기능 저하 및 본래의 목적 달성 불투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수로연장 5.73km, 수로폭 400m, (매립 0.58km²) ○ 주요시설 : 수문 2개소, 갑문 1개소, 부지조성, 마리나시설 등 ○ 총사업비 : 3,680억 원

10 계양역 복합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양역 일대의 복합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건의

- ① 공공주택지구 지정, ② GB해제 및 해제총량제 제외,
- ③ 군부대 이전, ④ 인천1호선 차량기지 이전,
- ⑤ 대장홍대선 도철산단역 경유 계양역 연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D, 공항철도, 인천1호선이 교차하는 계양역을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경제·관광 거점으로 조성 필요 ○ 도시 확장으로 도심에 위치하게 된 군부대 및 인천1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통합개발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계양역 일원 ○ 규모 : 5.9km²(약 180만평) *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2배 ○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 GB해제 - 군부대 이전 - 대장홍대선 도철산단역^(가칭) 경유 계양역 연결 - 인천1호선 차량기지 이전 및 인천순환3호선 차량기지 통합 건설

IV 의료 · 문화 · 관광

11 인천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제2인천의료원 신설 포함 지방의료원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적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은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하며, 울산을 제외한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이 절실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병상 수 45.2병상, 공공의료기관 지역의료서비스 점유율 2.9% ** ('23년) 공공의료기관수 : 전국 5.2% vs 인천(3.7%), 병상수 : 전국 9.5% vs 인천(4.3%) ○ 필수중증의료 자원 공급이 부족하고, 치료가능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인천 51.49명 >부산 46.90명 >울산 43.14명 >서울 42.43명 >경기 42.27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면적 : 캠프마켓 A구역 일부(부평구 산곡동), 40,000m² ○ 규모 : 중증응급 대응 가능 규모(400병상), 21개 진료과목 ○ 총사업비 : 3,074억 원

인천국제공항 대형 항공사고 등 재난 대비 목적의 종합병원 설립

▶ 의료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부재,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불가 ○ 최근 대형 항공사고에 대비한 외상센터병원 필요성 부각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면적 : 인천국제공항 주변(미단시티 내 의료용지), 123,000m² ○ 규모 : 300병상 이상, 20여 개 진료과목 ○ 총사업비 : 2,829억 원(추정)

해외유입 신종감염병의 국내 확산 선제적 차단 및 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전문병원은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안전망 핵심 시설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에 수도권 1개소, 제주권 1개소 추가 구축 ○ 공항과 항만 등 주요 출입국 시설이 위치한 관문도시 인천에 (수도)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 위기에 선제적 대응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음압 36병상, 외래관찰실·음압수술실 각 2병상 ○ 총사업비 : 449억 원(국비)

12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옛 고려왕도 강화군에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고도(古都)에는 국립박물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려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특성화한 국립박물관은 전무함 ○ 남한 유일의 고려 왕도인 강화에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건립하여 전국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고려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강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국립박물관 1식 신축 ○ 총사업비 : 500~900억 원(국비)

13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인천 설치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글로벌캠퍼스 유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은 음악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교육과 진로를 위해 지역 예술 인재들의 타 지역 이동이 불가피 ○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로 지역 간 문화예술 균형 발전과 및 인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학교와 인천의 문화예술 사업을 연계하여 인재양성, 국가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및 K-컬처 허브 도약 기반 마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미니 베니스

14 공항경제권 중심 K-콘텐츠랜드 조성

공항경제권 영종·청라국제도시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영상문화 복합산업 클러스터 (K-CON LAND) 조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신수출 동력 확보, 문화관광 유치에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경제권 내 'K-콘텐츠 허브' 구축 ○ 공항 이용객 및 인근 국가 소비자(중국, 일본, 동남아 등) 유치를 위한 국내·외 문화·산업 연계 및 관련기업 집적화 필요 ○ 영상·미디어, K-POP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 청라) 내 6개 지역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끊임 없이 콘텐츠가 생산되는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 조성 -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콘텐츠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세계인이 찾아오는 콘텐츠 관광 목적지 조성 - 세계적 콘텐츠 및 투자 기업 유치

15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공원도시 지정

- ▶ 수도권 대표 세계적 공원조성을 위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 ▶ 공원 가치를 활용한 도시활성화로서 **공원도시 지정 법제화 건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래습지 일원은 자연성이 높은 하구이자 서해안 최대 규모 갯벌로서 세계 유일 염생식물과 염전문화를 보유한 자연 자산 ○ 소래습지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적 공원으로 조성하고, 인천을 '공원도시'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관리를 통해 녹지와 공존하는 도시의 모범적 사례로 발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도시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남동구), 규모 약 6km² ○ (추진방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6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 지방 이양

- ▶ 지역현안 해결 및 산업발전을 위한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 지방 이양
- ▶ [지방세법 개정] 카지노를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확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제자유구역 복합리조트 집적화 사업 추진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내 국내 최대규모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설 2개소 조성 ○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해 내국인 출입금지 이외의 특별한 관리감독 업무 전무 ○ 사행산업(6종)* 중 경마 등 3종은 과세중이지만, 카지노 등 3종은 과세대상에 미포함(지방세법 제40조) <p>* 과세 3종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미과세 3종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p>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지노 사업이 무산된 RFKR 복합리조트 사업지의 장기간 방치에 대한 지역 민원 폭증, 인스파이어 1-B단계 추진 등 관련 현안 대두 ○ 정부(문체부)와 인천경제청의 협업으로 추가 투자기업 유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관련 범죄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 행정 절실 ○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레저세 도입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과세 형평 실현

V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해결

17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 ▶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 ▶ 임기 내 정부 주도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 ▶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사항의 온전한 이행

필요성

- 수도권매립지 운영('92년~)에 따른 인천시민들의 환경적·경제적 희생과 피해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4자 간 합의* 도출('15.6.,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 *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4자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우선 사용하면서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함
- 그러나 기관 간 내재한 이해와 온도차 등으로 3차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무산 등 합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 당초, 국가 주도로 조성한 수도권매립지의 문제이고,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기본적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국가 폐기물정책임을 고려,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과 주도적 역할 필요

18 접경지역 균형발전 도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

필요성

- 강화·옹진군은 접경·도서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으로 규정되어 각종 규제 적용
- 과도한 직·간접적 규제로 재정자립도, 고령화지수 및 낙후도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고, 지역 내 불만 여론 심화
- (직접규제) 택지·산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대학·공장 제한
- (간접규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제감면대상 제외,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특구 지정 배제 등
- (기타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전체 면적의 46.4%), 농업진흥구역(전체 면적의 20%), 문화재보존지역(강화군의 4.1%) 등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범위 확대 및 선박건조비 신설**
- ▶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으로 확대**
- ▶ **국민건강보험료 30% 추가 감면**
- ▶ **전기요금 연 20만원 감액**

필요성

-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서해 5도는 신체적·경제적 위험노출,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
- 육지와와의 교통수단 확충, 거주기간 차등 없는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및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적극적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

1982년부터 지속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규제 완화

필요성

- 인천 연안은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1년 내내 야간항행이 제한*되어 주간(일출~일몰)에만 조업 가능
- * 어선안전조업법,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장 변화로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어종의 활동시간을 고려한 야간조업 허용 필요

섬 주민 이동 편의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주간운항 및 시계제한' 규제 완화

필요성

- 도서지역에서 여객선은 필수 사회 기반시설
-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
- * (주간운항) '08년부터, 주간운항만 가능
(시계제한) '03년부터, 시정 1km 이내 시 운행 제한

- ▶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강화군 소음 피해지역의 지원근거 마련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공과금 감면 등]
- ▶ 접경지역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의 대남 소음방송이 일상화·장기화되면서 강화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누적, 정주생활 곤란 ○ 북한 소음방송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시기 : '24.7.~현재까지 ('25.3월 부터 강도 강화) - 피해규모 : 강화군 4개 읍·면(송해면, 교동면, 양사면, 강화읍)
-----	---

19 F1그랑프리 대회 유치 지원

- ▶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F1 대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에 추가
 - 시설바우징비의 30% 국비지원 건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세계적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없는 국내 상황 ○ 월드컵 축구,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F1 그랑프리”의 인천 유치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 인천은 최고의 공항·관광 인프라가 있고, 국내·외 모터스포츠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성공적 개최 자신 ○ '24년부터 F1측과 대회유치 논의 중이며, 복수의 국내기업과 프로 모터 구성 협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시기 : 2027년 시작, 5~10년간 개최 계획 ○ 개최위치 : 인천시 일원 ○ 경기내용 : 시가지 서킷 기반 F1 그랑프리

20 인천형 출생정책의 국가정책 전환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저출생정책의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지방재정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인천형 출생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전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06년부터 현재까지 출생정책에 380조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하는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이는 향후 국가와 지역의 존망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부상 ○ 인천은 출생부터 전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i+1dream 정책 추진 ○ '24년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1.6%로 전국 평균(3.6%)의 3배 이상으로 압도적 전국 1위를 기록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형 출생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전환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단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꿈수당(1,980만원) - 국비지원분 포함 출생아 당 1억원 지원

인천형 '천원주택' 정책을 국가 출생률 제고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전환 및 전국 확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및 출생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출생률 저하 및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인천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 「천원주택」 추진 ○ 국가 매입임대주택 유형 중, 신혼·신생아 유형을 「천원주택」으로 우선 지원하여 국가적·시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규모 :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 지원내용 :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으로 최장 6년 공급 ○ 신청자격 : 무주택 가구 중 신생아 가구,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등

21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인천상륙작전은 자유수호와 국제연대의 상징으로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건의

필요성

- 「9·15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 전세를 반전시킨 결정적 작전으로 UN군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자유수호, 최초 국제 연합 작전으로 세계사적 의미
- 참전국의 희생을 기리고, 보훈·안보의식 고취와 자유·평화·연대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행사

22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재정 지원

지방자치 선도적 혁신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요청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등 설치법」 개정 등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 통합 지자체 사례에 준하는 정부 차원의 재정(국비·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

- '26.7.1.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철저한 준비 필요
 - * 중·동구 → 제물포구(중구 일부+동구 통합) / 영종구(중구에서 분리)
 - 서구 → 서구 / 검단구(서구에서 분리, 신설)
- 과거 창원, 청주시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약칭)」 특례로 재정지원을 받았으나, 인천시 개편에는 재정지원 근거 부재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I. 지방자치권 확대

□ 자치입법권 확대

- 조례제정 범위 협소(법령범위 내, 법률위임 요구), 자치입법권 제한
-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확대 필요

요구사항

- ◇ 조례제정 범위 확대(헌법 §117 및 지방자치법 §28 개정)
- ◇ 법률위임 요구 조항(지방자치법§28 단서) 삭제

□ 자치조직권 확대 · 개선

- 현재 법령에 의해 지방정부의 실·국·본부 수 등 과도한 제약
-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 탄력적 조직운용 필수

요구사항

- ◇ 지방 행정기구 · 정원 등 조례위임, 기준인건비 제도 폐지

II.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 중앙-지방 수직적 세입 불균형으로 지방의 자체세입 기반 취약
- 지방 과세자주권 및 조세행정권 제약으로 자치와 책임 실현 한계

요구사항

- ◇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신세원 발굴 : 국세-지방세 5:5
- ◇ 지역성 강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신세원 발굴

□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 대응비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난 가중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등 소득보전형 복지사업 전액 국비지원 ◇ 포괄보조 전면 도입과 지방이양사업 국고전환 재검토
------	--

□ 지방채 발행 대상범위 확대

- 대내·외적인 재정리스크와 예측할 수 없는 시장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재정 운용방안 필요

요구사항	◇ 지방채 발행대상에 '보통교부세 차액 보전' 항목 신설
------	---------------------------------

Ⅲ.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이관

- 지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지역사회 연계 발전 제약
- 지방과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책임소재 불분명 등 야기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항만, 중소벤처기업, 환경, 고용노동, 국도하천, 식의약품 등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이관 ◇ 인천항만공사, SL공사 등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	--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INCHEON**